

‘환경기술인의 날’을 맞아하여

이종영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감사



지난 10월 11일 2005년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정원 불법도청파문으로 불거진 X파일일 것이다. 위낙 민감하고 시끄러웠던 사안인 만큼 언론의 관심과 여론도 모두 그 곳에 집중된 느낌이었다. 그 요란법석 했던 현장에서 소외된 곳은 어디일까? 그건 예년에 비해 별다른 이슈도 없이 고만고만한 내용들과 이미 대부분 알고 있었던 사안들로 채워진 환경부 국정감사일 것이다. 맥빠지고 김새는 국감, 우리나라 환경이 그만큼 좋아진 것은 아닐 것이고 TV에는 미국 카트리나 대홍수, 파키스탄 대지진으로 인한 참사 등 전 지구적인 환경재해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었다.

국감이 끝나기 하루 전인 10일은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환경기술인의 날’이었다. 최근 환경문제가 강조되면서 우리 환경기술인들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나 국감관계로 환경부장관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각 나라에서는 지구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점차 환경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환경규제가 신무역장벽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의 환경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환경이 모든 정책입안에 있어 최우선 고려대상이 된지는 오래이다. 향후의 환경규제 또한 과거의 농도규제에서 점차 총량규제로 옮겨가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조만간 총량규제가

울산, 여수지역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비해 우리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부의 시각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다. 정부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1·2종 사업장에서의 환경자격증 미소지자의 기술인선임 가능검토는 그런 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고 정부의 환경에 대한 무지함에 다시 한번 씹쓸해진다.

이에 환경기술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환경기술인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의 영향을 가장 실질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이고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환경기술인의 모습은 어떠한가? 환경의 최일선에 있는 환경부서장으로서 환경정책이 입안되고 발효되기까지 항상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규제, 기준 등에 시달리면서 환경기술인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후회스러울 때가 많다.

이제 환경기술인들은 연합회라는 하나의 조직을 통해 환경기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환경기술인들은 환경을 지키고 가꿔나가는 사명을 가진 전문기술인들인데, 정작 규제를 지키기 급급해 환경기술인의 위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기술인 육성책을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강화되고 세밀화되어 가는 국내외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처음 열린 환경기술인의 날 행사를 보면서 앞으로 환경기술인들의 위상이 좀더 높아지기를 기원해본다. 환경기술인들의 건승을 기원하며…